

# 정무위 아, 보훈처 편향교육 박승춘 수사해야

(보훈처장)

법사위, 여야 사이버위 '덧글 의혹' 공방...산업위, 한수원 납품비리 강도높게 비판

## 국감 현장

국회는 28일 법제사법, 정무, 산업 통상자원위 등 13개 상임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속개하고 정부 정책을 점검했다.

이날은 특히 법사위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덧글 의혹', 정무위에서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을 각각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또 산업위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불량 부품 납품으로 인한 원전 가동 중지를 포함한 원전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으나 여야의 입장 차이는 분명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관의 독일 육사 후배인 연제욱 소장이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고 민간심리전 부장으로 있던 이종명 소장은 국정원 3차장으로 갔다"면서 "연제욱-이종명 라인에서 군이 불법 대선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530단, 31부대 등 내부 조직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두 차례나 공문서를 허위 위조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두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연제욱 소장이 사령관이 되고 79명으로 확대 개편됐고, 국정원 직원이 한 정치 개입을 리트윗하거나 공유한 것도 22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본인 계정으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4인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군무원 J씨의 트위터 글 320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신변장치가 2268건(70.7%), 북한(순수 종북세력) 비판 693건(21.6%)으로 정치·선거 관련 게시글은 246건(7.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국가보훈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야당이 제기한 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이 전면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작년 총·대선 전후로 보훈처 산하 25개 보훈지청에서 20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1411회의 보수 편향적 안보교육이 진행됐다"며 "보훈처가 안보교육을 진행하면서 야당을 중북·좌파 세력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나라사랑 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에 대해 "5·16 군사쿠데타를 미화·찬양했고 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훈처 DVD 교재에는 박정희 정권 독재 미화, 민주화운동 폄해 등 내용이 담겨 있는 등 대대적인 편향교육을 해왔다"며 박 처장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승춘 처장은 "안보전문 강사들이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 이야기로 보훈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편향교육" 주장을 반박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나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있다면 교육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박 처장을 거듭했다.

◇산업위=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부품업체 비리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홍지민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 고장과 관련해 비리 업체들에 1조50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전력 손실과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면 적은 액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은 "지난 6월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에서 1급 간부 240여명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냈지만, 한 건도 수리되지 않았다"며 "대국민 쇼를 벌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한수원은 창립 후 모두 3877명의 직원을 징계했다. 이는 전체 직원의 41%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4대강 빛더미 떠안은 수자원공 질타 공기업 방만 경영·낙하산 인사 추궁

### 국감 인물

민주당 이윤석 의원



표해 국감장 퇴장을 요구하고 대한지적공사 등 국토부 출신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평균 인건비 1억700만원, 3년간 복지비 227억원 등 '돈잔치 경영'과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하루이자 201억원, 총부채 208조원 등 '방만 경영'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 실태를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이명박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 논란으로 항상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삼일위였다. 국토위 소속의 이윤석 의원은 민주당 간사로서 여당에 맞서는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 같은 당 소속 상임위 의원들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국토위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과 낙하산 인사, 공기업 방만 경영 등에 관한 민주당의 질의 방향 설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이 의원은 ▲공공기관 4대강 참여 ▲낙하산 인사 ▲공기업의 방만경영 등 도덕적 해이 등을 질타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자원공사가 '부채공사'로 전락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하는가 하면,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 내정에 대해 민주당을 대

표해 국감장 퇴장을 요구하고 대한지적공사 등 국토부 출신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평균 인건비 1억700만원, 3년간 복지비 227억원 등 '돈잔치 경영'과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하루이자 201억원, 총부채 208조원 등 '방만 경영'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 실태를 질타했다.

또 새누리당의 서울시 국감에 맞서 경기도를 국감대상 기관으로 채택, 맞붙을 놓는 등 여당과의 정치적 대결에서도 물러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당의 정치공세성 질의를 방어하는 한편 경기도의 재정파탄, GTX 3개 노선 동시착공 주장의 정치성,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 "전남 교통R&D 정부 지원금 전국 꼴찌" 주승용 의원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인 민주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 R&D 정부출연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6년간 전남이 지원받은 정부 예산은 30억원으로, 전체 지원 예산 2조2440억원의 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도중 최하위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곳은 경기도로 7748억원(34.5%)로, '꼴지'인 전남과는 258배나 격차가 났다. 2위는 서울(4967억원, 22.1%), 3위는 대전(4077억원, 18.2%) 등이다. 주 의원은 "R&D

투자와 연구 인프라의 불균형은 결국 지역별 생산성과 성장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 "조폐공사, 경영위기 책임 하위직에 전가" 이낙연 의원

한국조폐공사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원감축을 시작한 2009년부터 올해 들어 9월까지 4급 이하 일반직은 1411명에서 1265명으로 10.3%(146명) 줄었다. 반면, 고위직인 1~3급 관리직은 121명에서 130명으로 7.4%(9

명) 늘었다. 이 의원은 "경영위기 책임을 하위직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영위기 책임을 하위직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수원 수의계약 비중 44.6%... 조달청의 4배" 김동철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은 28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과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4개사의 지난 5년 동안(2008~2012년)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수원의 수의계약 비중은 44.6%, 한전 KPS는 36.6%, 원자력 연료는 34%, 한전기술은 23% 등이었다. 이는 조달청의 수의계약율(평균 11.5%)에 비해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 가까이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 납품은 곧바로 비리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해양 긴급신고 전화도 절반이 장난전화" 김영록 의원

각종 해양관련 사건·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통된 '해양 긴급신고 122' 전화 중 절반이 장난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긴급신고 122'에 신고된 전화건수는 총 21만1797건으로 이중 10만5259건(49.7%)이 장난전화인 것으로 집계됐다.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양 경찰청은 장난전화를 감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해양경찰의 긴급출동시 1회 소요비용은 연료비 등을 포함해 약 24만원으로, 육상 경찰의 1회 출동비용 6500원보다 37배나 더 소요

### "지상파 공익광고, 시청률 낮은 시간대 집중" 장병완 의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제작해 지상파 TV를 통해 방영하는 공익광고가 매년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집중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결과, 방송 3사의 공익광고 방영횟수는 ▲2011년 5053건 ▲2012년 4465건 ▲2013년 9월 현재 3699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까이 방송되고 있다"며 "특히 이 같은 현상이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최근 3년간 방송 3사의 시급별 공익광고 집행현황을 분석

장 의원은 "지상파 TV를 통해 방영하는 공익광고가 지상파의 상업성에 떠밀려 시청률이 가장 낮은 새벽 시간(B,C)시간대에 90%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기동 제일OP 901호**  
 ▶분양 평수 53P  
 ▶20층 건물중 9층 코너, 창가, 전망좋은  
 ▶시세-1억 7000만원  
 ▶매매가(일시불 조건)-1억 2000만원

**오피스텔 매매**  
 주인 직매 H. 010-4667-9300

**수기동 제일OP 2001호**  
 ▶분양 평수 77P  
 ▶20층 건물중 20층 코너, 창가, 전망최고  
 ▶시세-2억 5000만원  
 ▶매매가(일시불 조건)-2억 2000만원

#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 사정상 "매매"

##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대지148P, 건물 480P, 신축건물  
 ▶5층 건물(1층 82P, 2~5층 각100P)  
 ▶감정가/시세-23억원  
 ▶매매가-22억원(일시불 조정가)  
 ▶대출-14억원(이자 월 560만원)  
 ▶이전비-없음(법인체 양도 양수)  
 ▶주소-순천시 왕지동 872-6번지

주인 직매 H. 010-4667-9300